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김동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89
----------	------

발의년월일 : 2012. 06. 21.

발 의 자 : 김동규·김동수·김영철·김정택·
김철진·나정숙·박영근·박은경·성준모·송두영·
신성철·윤미라·윤태천·이민근·이형근·전준호·
정승현·정진교·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21인)

□ 주 문

-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과세대상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사회적비용 부담과 지역주민의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조력 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함.

□ 제안이유

- 지방자치단체가 앓고 있는 열악한 재정문제의 해결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신세원의 발굴이 필요한 실정이며, 특히, 지역자원 시설세의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과세유예기간을 두고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는 실정임.
- 조력발전소 댐건설은 조류변화 등의 영향으로 어장 생태계변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피해 발생하고 있으며, 바닷물이라는 공공

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타당함.

☐ 결의안 : 덧붙임 1

☐ 관련 참고자료 : 덧붙임 2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현황
-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황

조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결의안

플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주재원의 확충이 필수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사회복지 사업의 확대 등에 따라 해가 갈수록 낮아져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 안산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2002년 63.3%에서 2012년도에는 48.8%로 하락하여 자주재원부족으로 시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지방세에 대한 과세자주권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발굴이 절실하며, 이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의 대상범위 확장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제141조에 따르면, 지역자원시설세는 지하·해저자원, 관광자원, 수자원, 특수지형 등 지역자원의 보호 및 개발, 지역의 특수한 재난예방 등 안전관리사업 및 환경 보호·개선사업, 그 밖에 지역균형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거나 소방시설, 오물처리시설, 수리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과세로서,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특수 부존자원이나 시설을 이용

해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되는 응익과세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자원·시설을 소비·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외부효과에 상응하는 공공자원에 대한 보상금 또는 사용자부담금적 성격 및 환경세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세목이다.

현재 지방세법에 따라 수력발전은 1992년부터, 원자력발전은 2006년부터 발전소가 설치된 주변지역의 환경위해 요인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지역자원시설세가 과세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화력발전에 대해서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여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과세가 예정되어 있으나 조력발전의 과세근거는 누락되어 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난 1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방안'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해양심층수·천연가스·조력발전 등은 지역에 환경오염이나 훼손을 유발하고 지역개발을 제한해 주민들의 경제적 후생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특정자원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시화호조력발전소」의 경우 발전용수를 이용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취지에 부합하는 발전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지방세법에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인 발전용수는 직접 수력발전에 이용되는 흐르는 물로만 한정하고 있어

연간 최대 발전량 5억5천만 KWh로 「소양강 수력발전소」 발전량의 1.6배에 달하나 조수를 이용한 조력발전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또한 조력발전소 가동에 따라 조류변화, 녹조류의 이상 번식 등으로 어장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인근 어민에게 직·간접 피해가 유발되고 있으며, 사업자는 바닷물이라는 공공자원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는 만큼 이윤의 일정부분은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해지역 보상차원에서의 균형개발, 수질개선과 수자원보호 등에 소요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조력 발전에 대하여도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지방세법의 개정은 시급하다.

이에 우리 안산시의회와 76만 안산시민은 환경훼손의 원인자부담 원칙, 과세대상간의 형평성,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조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7. 17.

안산시의회 의원 일동

시화 MTV단지 조성에 따른 우리지역 생산품 및 건설업체 우선 선정 건의안 (박영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290
----------	------

발의년월일 : 2012. 07. 12.

발 의 자 : 김동규·김동수·김영철·김정택·김철진·나정숙·박영근·
박은경·성준모·송두영·신성철·윤미라·윤태천·이민근·
이형근·전준호·정승현·정진교·한갑수·함영미·황효진
의원(21인)

□ 주 문

- 시화 MTV 단지 조성 건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이용하고 지역 건설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안산시 지역경제를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제안이유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동북아 시대를 고려한 수도권내 첨단산업 용지 공급을 목적으로 시화MTV 조성 공사 안산시와 시흥시 일원에 9,256,000m²를 조성하고 있음.
-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여 분양하는 대형 프로젝트로 발생한 수입을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용하고 해당 지역의 업체를 선정하여 수익금이 환원되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됨.

□ 건의안 : 덧붙임 1

□ 관련 참고자료 : 덧붙임 2

- 「시화호 조력발전소 건설사업 현황
- 「시화호 조력발전소 현황

안산시 건설업종별 등록현황

합 계	등록업종수	922
	업체수	667
실내건축공사업		36
토공사업		53
석공사업		8
도장공사업		31
비계·구조물해체공사		18
철근·콘크리트공사업		38
기계설비공사업		89
상·하수도설비공사업		33
보링·그라우팅공사업		2
철도·궤도공사업		1
포장공사업		16
수중공사업		1
조경식재공사업		74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29
강구조물공사업		10
철강재설치공사업		0
삭도설치공사업		0
승강기설치공사업		6
가스시설시공업 제1종		31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		65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		97
난방시공업 제1종		31
난방시공업 제2종		104
난방시공업 제3종		2
시설물유지관리업		30
미장·방수·조적공사업		21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85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11

안산시 건설기계 등록현황

건설기계명	현 재 등 록 댓수			
	합 계	관 용	자가용	영업용
01 불도저	11	0	6	5
02 굴삭기	638	4	158	476
03 로더	118	10	50	58
04 지게차	2,766	2	2,424	340
06 덤프트럭	1,036	2	60	974
07 기중기	25	0	3	22
09 롤러	17	0	11	6
12 콘크리트 피니셔	0	0	0	0
14 콘크리트 믹서트럭	1,063	0	4	1,059
15 콘크리트 펌프	23	0	2	21
17 아스팔트 피니셔	4	0	0	4
20 쇄석기	1	0	1	0
21 공기압축기	10	0	4	6
22 천공기	9	0	2	7
27 타워크레인	30	0	0	30
[총 계]	5,751	18	2,725	3,008